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발전시킨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신년 기자간담회서 연금개혁 선도·기금 수익 제고 등 추진 방향 발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29일 서울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이 주인인 연금에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추진 방향도 발표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 이사장은 먼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개혁을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적인 모수개혁과 함께 기초연금제도의 개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재구조화,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 등 구조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위해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논의 중인 기초연금 수급기준 개선과 함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의 발생시점 적립, 청년 첫 보험료 지원에 활용하는 등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수익률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다변화를 위해 기금 운용 인력을 더 늘리고, 5대양 6대주

곳곳을 누비는 국민연금이 되기 위해 다섯 번째 해외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우수한 경력직 인력을 채용하는 한편 대졸 미경력자를 주입운용역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책임투자 원칙과 ESG 원리 적용도 강화해 유니버설 오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국내증시 부양이나 환율안정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목적에 충실하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고해 나가는 투자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3년 연속 역대급 수익률을 올리고 올해부터 보험료를 인상으로 기금의 규모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

이므로 기금운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밝혔다.

또한 김 이사장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신탁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신청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신청주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계획도 밝혔다.

한편 전북혁신도시의 금융생태계 조성을 통해 자산운용 중심지로 발전하도록 돕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기관을 선도하는 인공지능(AI)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비전과 약속을 제시했다면, 이번 간담회는 그 비전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행정 혁신을 통해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국산 감귤 '탐나는봉' 보호 강화

농촌진흥청, 유전체 기반 식별 기술 개발·특허 출원 완료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내에서 육성한 감귤 '탐나는봉'을 유전자 수준에서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탐나는봉'은 한라봉으로 알려진 '부지화' 기반(주심배) 만감류 품종이다. 국내에서는 2014년 품종보호 등록을 받았고 미국에서는 2019년 식물특허 등록을 마쳤다. '탐나는봉'은 '부지화'와 겉모습은 물론 유전적 특징까지 비슷해 맨눈이나 일반적인 성분 분석만으로 품종을 구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부지화'와 '탐나는봉' 유전체를 전체 유전체 정보 분석법(WGS)을 통해 해독했다. 그 결과, 2번 염색체 염기(SNP)와 7번 염색체 염기에서 두 품종의 유전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염기서열을 찾았다. 이어, 이 염기서열을 이용해 종을 식별할 수 있는 유전자 표지(KASP)를 만들었다. /오상근 기자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면 '탐나는봉'과 '부지화', '부지화' 기반 품종의 잎과 열매로 '탐나는봉' 품종을 100%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국산 감귤 품종을 보호하고, 해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종 혼입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객관적 확인 수단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표준검사 절차를 마련하고, 유전자 표지 정보를 기술이전 하는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국내의 유통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실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농업인 부담 완화·사업비 확대 농지은행사업 현장설명회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동인)는 농지은행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농업인에게 알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농지은행사업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관내 10개 지사가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면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사업비 대폭 증액 등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개편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공사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영농 규모화 촉진,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지은행'을 통해 다

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들에게 임대하여 농지를 실경작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업인에게 연간 임대료의 2.5%로 부과되던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를 2026년 1월 1일부터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농가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고, 최근 경기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오상근 기자

영세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덜다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25만원 경영안정 바우처 지급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설 명절 전인 2월 9일 시작해, 빠르면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연 매출 1

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총 5,790억원을 지원한다.

사용처(총 9개)의 경우, 공공급·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 외에 전통신장 화재공제료를 새로 추가하였다. 다만,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회비는 사용 항목에서 제외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의 지원 대상, 신청 및 사용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 △20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400만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로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이다.

다만,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일 경우 1개의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며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이다.

지원 신청은 2월 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의 신청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 참여 중소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6년도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R&D)'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 전용 R&D로, 지역 주력사업 기반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공모는 총 1,049억원(국비 734억원, 지방비 315억원) 규모로 306개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 내 산학연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컨소시엄 형태의 지원을 크게 늘린다.

사업은 두 가지 내역으로 운영된다.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내역은 산학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하며,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간 협업과 산

학협력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선정과제는 2년간 최대 14억원을 지원하며, 컨소시엄에는 중소기업 2개사와 대학 참여가 필수적이다.

반면, '지역기업 역량강화' 내역은 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여 지역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년간 최대 4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공모는 지역의 다양한 기술 수요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지원품목을 전면 재검토했다. 지자체와 전문가와 함께 지원범위를 재구성하여 제조,

모빌리티, 바이오, 방산·우주, 에너지, 문화관광 6대 분야와 11개 세부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며, 지원품목 수는 2025년 342개에서 2026년 684개로 확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1일부터 3월 9일 오후 6시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it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30일부터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공단, 전북혁신도시 KB금융타운 조성 결정 환영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 28일 KB금융그룹이 전북혁신도시에 핵심 계열사들이 총집결한 KB금융타운 조성한다는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KB금융그룹의 이번 결정은 지난 13일 김성주 이사장이 전주에 사무소를 설치한 자산운용사와의 간담회에서 "전주가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반드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이후 첫 사례다. KB금융은 올해 KB증권과 KB자산운용사의 전주사무소를 개설하고, 비대면 전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며, KB손해보험도 광역 스마트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KB금융타운에는 기존 전북혁신도시 내 임직원 150여명을 포함해 추가로 100여명의 임직원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전화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